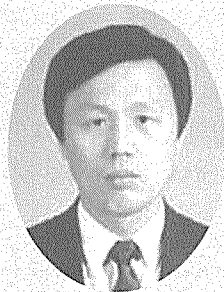


정유산업의 환경변화와 석유정책 방향



유 창 무

〈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

희망과 기대 속에서 맞이한 New Millenium을 시작하는 금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어느새 각 분야에서 한해의 성과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반성하며, 한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전반에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으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치유되지 않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4대부분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장경제원리를 확립하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는데 경제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각 지역별, 국가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세계 경제를 주도해온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내년에는 전세계가 소비감소, 투자부진 등 경제침체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 환경변화와 외부적 충격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외부적 충격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제유가의 급등이라 할 것이다. 99년 OPEC의 감산으로 유발된 국제유가 인상은 중동 정세의 불안, 소비국의 석유재고 부족, 투기수요의 가세 등으로 금년중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Dubai유는 한때 배럴당 \$32 수준에 근접함으로써 곁프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산유국의 증산, 소비국의 공동 대응노력으로 최근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 상황은 석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석유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에너지 소비절약 및 해외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입찰 담합, 텀핑수출 및 판매, 상표표시제 관련 논란 등 석유산업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표출되었다. 국회, 언론 등이 제기한 문제점은 정유업계

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가져와 사회전반에 큰 파장을 야기할 바 있다. 이에 따라, 석유산업 전반의 건전한 질서 유지와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세계 석유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지속과 국민 편의 증진에 따라 석유수입 및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9년 기준으로 석유수입은 제4위(원유는 제3위), 석유 소비는 제6위를 점하고 있다. 석유소비 증가에 따라, 국내 석유산업도 에너지산업 중에서 최대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렇지만, 외형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석유산업은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석유산업이 신뢰를 확보하고, 내실있는 질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개방화, 자유화에 따른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모적 경쟁 심화에 따른 유통 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석유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90년대 후반부터 석유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단계적인 개방화, 자유화 기조를 취해 왔다. 석유 가격 및 수출입 자유화, 정유업의 신규진입 자유화,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등이 주요 시책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수입사가 증가하고, 산유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되는 등 석유산업의 구조개편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점체제의 테두리 내에서 영업해온 정유업체가 경쟁력 제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안정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정유산업의 경쟁력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

이다.

먼저, 국내 소비수준에 맞는 적정 설비규모를 유지토록 하는 한편, 제품 수요의 경질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분해·탈황 등 고도화 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석유제품의 고급화 경향을 감안하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지원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한편, 궁극적인 경쟁력 확보는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업계의 입장에서도 설비투자, 기술개발과 함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 마케팅 능력 강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공정한 경쟁은 필연적이며, 이윤 추구를 위해 조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석유유통 시장은 불공정한 과열경쟁과 업계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구매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유통시장에서의 대규모 덤핑, 정유업계와 수입사간의 갈등, 상표표시제를 둘러싼 업계의 이해관계의 대립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정 경쟁의 틀을 조성함으로써 문란한 유통질서를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다시 말하자면, 획일적인 규제 강화를 통해서라기 보다는, 합리적인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을 정립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담합 등 불공정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대처하는 한편, 가격설정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할 것이다. 중간상을 매개로 한 덤핑행위의 방지를 위해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명한 석유 거래 보장을 위해 '전자상거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상표표시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업계의 자율성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 석유제품 유통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

석유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 우리의 입장에서 석유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연말에 들어서면서 석유수급이 호전되고 유가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있으나, 석유자원의 한정성, 중동을 비롯한 국제정세의 불안정, 산유국의 지역적 편중 등을 감안하면 석유위기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위기대응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석유비축이다. 현재 정부와 민간을 합친 비축물량은 65일분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의 비축분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필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2006년까지 90일분 비축을 목표로 비축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비축의 목표 달성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사업(Joint Stockpile Project)을 추진하여 비축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것이다.

비축 확대와 함께 유가 및 석유수급 예측 능력을 높임으로써 원유 도입비용 감축과 원유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자 한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는 위험분산을 위한 해외 선물시장 참여 등 헤징(hedging) 기법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세계 석유시장에서의 위상 및 석유분야의 국제 네트워크화 진전 등을 고려할 때, 석유분야 국제협력 강화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평상시 산유국과 유대강화를 통해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소비국과 협력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금년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주요 중동 산유국 석유장관과 회담을 개최하여 양자간 석유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OPEC 총회 개최와 연계하여 원유 증산외교를 전개하여 산유국의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도 기존 산유국과의 협력관계

를 유지하는 한편, 이란 등 핵심 산유국과의 협력관계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특히 금년과 같이 국제유가의 급등 상황에서는 소비국간 공동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APEC 등 역내 국제기구 및 주요 국제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공동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IEA 조기 가입에 따른 부담과 의무이행을 고려하는 동시에, 소비국간 협력강화, 석유위기 대응능력 확보 차원에서 IEA 가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석유는 우리나라 에너지 총수요의 54%를 차지하는 핵심 에너지원이며, 향후에도 주도적 에너지원으로 위치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간 우리 석유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을 뒷받침해 온 공로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년에 석유산업 전반에 관해 지적된 문제점을 관련 업계와 정부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비판을 애정어린 총고로 받아들여 석유산업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석유업계는 대내외적인 경쟁력과 투명성(transparency)을 갖추어 나가면서, 관련 업계간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정부도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조정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제유가, 국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면, 석유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가까운 장래에 우호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석유산업 담당자 모두의 의지를 결집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새해는 석유산업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보다 성숙된 산업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